

# 시민운동, 발로 일구는 민주주의

## 교육의창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교육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때쟁이쯤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급기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과장은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라는 글을 본지 '교육의 창'에 실었는데,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광주시교육청의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글에 의하면, 시민단체들은 공익 추구를 한답시고 성찰에 게을러 뿐 아니라, 공론장에서 길고 짧은 것을 대보려는 겸손도 없이 '혼자서 떠든다'고 일갈한다. 무려 아도르노, 아렌트, 칸트까지 모셔와서.

표면상 글의 독자는 시민단체로 가정되지만 진정한 독자는 시민단체를 훈계하면서 분을 푸는 자기 자신이거나 이런 패기를 알아줄 동료나 상관(上官)이지 않을까 싶다.

'공익'이라는 단어는 그 추상성 탓에 구체적 맥락 위에서 의미를 풀지 않으면 하늘로 봉 뜨거나 의미가 왜곡되기 쉽다. 길거리에서 돈 받고 굴을 파는 일에도 공익성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공익의 상대성'을 글 밑자락에 깔아 링을 만들더니, 시민단체를 단 순화, 인격화, 약당화하여 셔츠에는 독불장군, 바지에는 이익 단체라 쓴 허수아비를 링 위에 세우고 패기 시작한다.

쩍! '아도르노 알아? 자명한 건 없어.'

스트레이트! '공익과 도덕성만 앞세우면 끝이나? 아이히만조차 유대인 학살할 때 그걸 공익이라 생각했단다.'

흑! '그래서, 아렌트는 말야. 사안 하나하나를 읽는 힘으로 보편을 세우자고 생각했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배운 셈이지.'

어퍼컷! '너희들에게 공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행정의 공익, 너희와 다른 다수 시민의 공익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성찰, 대화, 합의를 배우렴.'

다운! 땡땡땡.

위 같은 흐름은 '대화의 중요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끝맺었는데, 정작 교육청은 대화의 장을 폐쇄하고 있어서 모순된다. 그래서, 글 밖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 "자기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요구하는 것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 요구대로만 살기 힘든 행정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는 당부였으면 족했을 글은 이렇게 오만과 편견의 끝장이 된다. 아마도 관(官)이 시민사회에 던진 기념비적 훈수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도 '시민 협치'라는 포장지 위에서.

최근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추방당할 뻔했던 몽골 출신 학생을 구제하겠다고 우리 단체에 알려왔다. 교육청에서 시작해서 인권위, 언론까지 두드리고 두드린 결과다. 중학교를 올해 광주서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세금 아끼는 법무부, 무미건조한 광주 교육청 사이에서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들이밀 수밖에 없었다. 물론, 법무부, 교육청이 생각하는 공익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우리의 공익은 추방 위기의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했다. 그러자고 정관까지 만들어 시민들이 단체를 이루었고, 무거운 돈을 모았으며, 그런 가치로 시민의 발걸음을 짚어왔으니까

이런 서사를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시민사회에서 인정받고 지금 관(官)의 눈앞에 서 있는 '단체들'을 독선적인 '일부'로 몰아세운다면 새 사랑방에 놀러올 '다수'의 시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교육청이 조직해서 만들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들 후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다. 선거가 손으로 민주주의를 담그는 일이라면, 시민 운동은 주권자들이 발로 직접 일구는 민주주의다. 누구를 위한 공익이냐고? 그것은 헌법의 뿌리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주권자들의 발걸음일 뿐이다.

지난 3월 2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했다. 구멍가게가 생기더라도 개업하는 날만큼은 덕담을 건네는 게 인사상인데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꽃다발 대신 피켓을 들었다. '손님 맞이할 마음도 없으면서 새로 지은 사랑채 자랑하지 말라'고.

'시민 협치' 간판을 다는 날 시민단체 시위라니 어찌 보면 참 우악스럽고 짓궂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서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진 현실을 가장 절박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명망 높은 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손잡고 만들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17개 정책과제를 만들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선 직후 교육감 인수위와 훈훈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1주년도 못돼 빼격거렸다. 교육청은 정책과제 협약식을 거부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 그러는지 면담 요청을 했는데 협약식을 거부할 때 썼던 문장을 오려 붙여서 답했다.

'정규 수업 외 교육활동' 선택권을 두고 '학생 삶을 지키자'는 교육청 시위가 200일 동안 지속될 즈음, 기대는 걱정으로, 걱정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시위는 방치됐고, 면담 요청은 거부됐다. 스마트기기 관련 갈등, S고 학사 파행으로 면담을 요청할 때도 '궁금하면 교육청 사업 계획서 읽고, 의견 있으면 관련 부서에 서류를 내라'는 답변이 반복됐다.

어느 새부터인가 교육청은 시민단체를 언급할 때 '강성'을 붙이거나, '광주

## 社說

### 높은 사전투표율, 정치권 향한 냉엄한 민심

31.28% 역대 총선 최고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선을 향한 뜨거운 민심이 '거야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6일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22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1384만 90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이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광주는 38.00%로 전북 38.46%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차지했다.

높은 사전투표가 오는 10일 본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사전투표율은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12.2%였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26.7%로 두배 이상 뛰어올랐고 이번 총선에서는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대체로 본투표율 상승을 견인했지만, 반드시 본투표율까지 끌어올

렸던 것은 아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36.9%로 5년 전인 19대 대선 때보다 10% 넘게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높은 사전투표에 여야의 해석도 제각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 간 180석 의석수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다고 하며 사전투표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들끓는 열망을 받들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을 향한 유권자의 뜨거운 관심은 결국 정치권을 향한 냉엄한 심판이 될 것이다. 총선내내 여야간의 비방전에 유권자들은 실망했다. 아니 분노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에 고금리, 지속된 경기침체에도 정치권은 민생에 뒷전이였다.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높은 관심이 본 투표로 이어질 길 바란다. 정치권을 모조리 바꿔놓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한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 대학 5·18 관련자료 비공개 이유 무엇인가

#### 진실규명 위해 적극 공개해야

5·18민주화운동 전후 '시민들의 가두시위가 질서 있게 이뤄졌다'는 전남대학교 '학장회의록'이 44년 만에 공개됐다. '광주 시위가 격렬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된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4주년이 지났지만 진실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하고 최근 공개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마저 부실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다.

5·18기념재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남대로부터 입수한 학장회의록은 1980년 5월 17일, 전남대 학생처장의 5·16 학생가두시위사태에 대한 보고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학생처장은 5월 16일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 주도로 열렸던 가두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질서 있고 수준 높았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또 5·18 항쟁이 끝나고 두 달여가 지난 7월 7일 회의록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개강에 대비한 학생지도대책수립'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대학 간의

견 교환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기술회의를 구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는 광주에 대규모 군대를 보내 수많은 시민을 희생시켰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누가, 무슨 이유로 군대를 움직였고, 누가 발표 명령을 내렸는지도 미궁에 빠져있다. 인권유린과 시신 압매장 등 실제적 진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의 왜곡과 폄훼, 억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회의록을 공개한 재단은 '신군부가 대학 개강을 앞두고 강력한 대비책을 꾸려 5·18 이후 학생 탄압에 앞장섰다'고 해석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진상을 파헤쳐 진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학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비공개 자료를 적극 공개하는 것이 진상을 밝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부존재나 비공개 등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행동은 신군부의 학살을 숨기고 그들을 정당화시키는 비겁한 행태다.

## 호남 최고 정론지

#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 서석대

4·10 총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4, 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이 참여해 31.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은 수치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다. 특히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관심을 끌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며,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등이 뒤를 이었다.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은 10일 본투표 당일 다중이 투표소에 몰릴 것을 피해 본 투표에 한 영향과 여야 정치권이 각자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 또는 '거대 야당 심판'을 위한 투표 참여 열기도 해설된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속에 선거제도와 정치문화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 각종 선거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다섯 차례 총선 투표율은 그리 높지 못했다.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 21대

66.2%로 모두 70%를 밑돌았다.

투표율이 낮으면 소수의 의견이 전체를 대표하는 모순이 생기고 특정 이익을 가진 그룹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할 때 실제 민심과 표심의 간극이 좁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찍을 후보가 없다'는 말은 소중한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표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고도 하는 이유다. 정치권의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특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공천파동, 망언, 흑색선전은 투표할 마음마저 사라지게 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보여준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이 본선거일에도 재현될 것으로 믿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주인의식을 보여 줘 오만한 정치권에 따끔한 회초리를 때려주기를 기대한다. 벌써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이 투표를 마쳤다. 남은 두 명이 화답할 차례다.

박성원 편집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b>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b> <b>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b>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